



2025년 5월 (2025.5.1.~5.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호주 Australia

### 2025년 호주 연방 선거: 여성 유권자 영향력 확대와 정당별 젠더 기반 폭력 관련 공약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겸임연구원


2025년 5월 3일 치러진 호주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ALP)이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번 연방 선거는 밀레니얼 및 Z세대 유권자 수가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선 첫 선거로,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여성 유권자들이 중시하는 핵심 의제는 주거 안정,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임금 격차 해소, 성차별 개선 등이며, 이를 반영하여 각 정당은 다양한 여성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 중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노동당(ALP)은 2024-25 회계연도부터 6년간 총 5억 3,450만 호주달러(약 4,810억 원)를 투입하여 성별 기반 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 내각의 우선순위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 대상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600만 달러(약 54억 원)를 배정할 계획이다.
- 자유당(liberal)은 약 9천만 달러(약 810억 원) 규모의 가정폭력 대응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해자 등록 시스템(A national domestic violence offender register) 구축, 기술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 재산 분할 간소화, 재정적 학대 및 보석 관련 제도 개혁, 피해자 긴급 자금 보조 등을 포함한다.
- 녹색당(Greens)은 시민단체 Fair Agenda(fairagenda.org)가 제안한 모든 개혁안에 전면적으로 동의하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에 향후 12년간 총 120억 호주달러(약 10조 8,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회복 서비스 예산을 확대하고, 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지원금(Escaping Violence Payment)도 인상할 방침이다.
- 기타 소수 정당의 경우, 일부 정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았으나, David Pocock Party, Legalise Cannabis Party, Socialist Alliance은 Fair Agenda가 제안한 개혁안에 전면적으로 동의하였으며, Sustainable Australia Party는 성폭력 대응 개혁안에는 전면 동의하고, 가정폭력 대응 개혁안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

#### 참고자료

- Nasr, R. (2025.5.7). When will we see more women in Labor's key leadership roles? Women's Agenda.  
<https://womensagenda.com.au/latest/when-will-we-see-more-women-in-labors-key-leadership-roles/>  
(접속일: 2025.5.7)
- Hislop, M. (2025.5.5). Liberal Party needs to have hard conversations on women's representation, Linda Reynolds says. Women's Agenda.  
<https://womensagenda.com.au/latest/liberal-party-needs-to-have-hard-conversations-on-womens-representation-linda-reynolds-says/>  
(접속일: 2025.5.7)
- Boecker, B. (2025.5.4). The stakes are high for women this federal election: Here's where each party stands on the issues. Women's Agenda.  
<https://womensagenda.com.au/politics/local/the-stakes-are-high-for-women-this-federal-election-heres-where-each-party-stands-on-the-issues/>  
(접속일: 2025.5.7)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노동당은 전체 의원 중 약 57%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994년 도입된 여성 할당제와 당내 적극적 조치의 누적 효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리더십 직책은 여전히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돈 패럴(Don Farrell) 상원 부대표 등 주요 리더 중 여성은 페니 웡(Penelope "Penny" Ying-yen Wong) 상원 원내대표 한 명뿐이며, 이는 여성 의원 수 증가가 곧바로 리더십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퇴임을 앞둔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자유당 상원의원은 이번 총선을 자유당의 '포괄적인 실패'로 평가하며, 여성 유권자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당내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후보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에 집중 공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은 여성 정치인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2025년 호주 연방 선거는 여성 유권자의 영향력 확대와 각 정당의 여성 관련 정책이 전면에 부각된 선거로, 향후 호주 정치 내 성평등 정책 강화와 리더십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덴마크 Denmark

### 덴마크의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s) 지원정책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논의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보조생식기술(ARTs)은 인공적으로 생식과정을 유도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의미하며, 국가별 경제·문화·종교적 차이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규제 혹은 지원된다(The European IVF-Monitoring Consortium (EIM) for th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ESHRE) et al., 2024). 이는 보조생식기술 지원정책이 단지 가용재원(affordability)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및 다양한 가족형태(new forms of parenthood)에 대한 논의방향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덴마크 사례에 주목하여 보조생식기술 관련 법·제도적 설계(legal frames), 의학계의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regulations), 정책대상자 범위(accessibility), 공적재정지원(financial coverage) 등을 중심으로 보조생식기술 지원정책 형성 및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 ◎ 덴마크의 보조생식기술 지원정책의 발전


✍ 덴마크는 유럽국가들 중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나는 아기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Smeenk et al. (2023: 2326)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 출생아 수 대비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덴마크가 6.3%로, 스페인(8.9%)과 그리스(7.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를 출산할 당시 여성들의 평균 나이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후 보조생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022년 기준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나이 29.9세). 동시에 유급육아휴직, 현금지원, 무상 보육서비스 등의 정책이 특히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시술을 결정할 수 있다(Pedersen, 2023).


✍ 덴마크의 보조생식기술 지원정책은 1997년 첫 입법을 시작으로 2006년, 2013년, 그리고 2024년 세 번의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보조생식기술 관련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은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특히 낙태와 관련한 여성들의 권리에 관한 정치적 논쟁과 유사했던 반면, 덴마크의 경우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77년 무렵부터 국가의 규제없이 의학계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IVF(In Vitro Fertilization, 체외인공수정) 관련 실험들은 첫 입법을 논의할 당시 정치인들이 보조생식기술을 여성의 재생산권보다는 우생학 및 과학기술사용의 윤리에 관한 의학계 규제 의제로 인식하게 하였다(Larsen, 2015). 당시 해당 기술은 인간의 생식과정에 인공적인 기술이 개입하는 ‘괴상한 것(monstrosity)’ 혹은 ‘비자연적인 것(unnatural)’으로 인식되었다(Herrmann, 2022).

#### 참고자료


- Bryld, M. (2001). The Political Debate on Assisted Reproduction in Denmark. The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8(3), 299–312.
- Herrmann, J. R. (2022). 'Taming Technology' In E. Griessler et al. (Eds.), The Regul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in Europe: Variation, Convergence and Trends. London: Routledge, pp. 45–65.
- Larsen, L. T. (2015). The problematization of fertility treatment: biopolitics and IVF policy in Denmark. Distinktio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Theory, 16(3), 318–336.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06). Assisted Reproduction in the Nordic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and regulation.
- Pedersen, F. H. (2023). Tacit Concepts of Family in Legislation on Assisted Rep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37(1), 1–16.

 이러한 인식 속에서 1993년 덴마크 보건국(National Board of Health)은 규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조생식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보건당국의 개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Herrmann, 2022). 의학적 기술활용을 제한하는 방식 중 하나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의사들의 판단을 통해 여성들이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40세와 45세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이제한을 명시하였다. 이후 이는 1997년 도입된 법안(Act on Artificial Fertilisation)에서 45세 나이제한으로 굳어졌다.

 보조생식기술이 가족정책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 개정이 이루어질 무렵이다(Herrmann, 2022). 해당 시점 이후로 보조생식기술은 단순히 불임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문화적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들(특히 비혼모와 레즈비언 커플)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보조생식기술은 누가 부모(parenthood) 혹은 어머니(motherhood)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위주로 이야기되었다(Larsen, 2015). 예컨대, 레즈비언 커플의 기술 활용은 ‘아버지의 부재’가 태어날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문제적이라 여겨졌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성애 규범 하의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젠더화된 가족규범을 드러냈다(Bryld, 2001).

 정치적 논쟁 끝에 2006년 비혼모와 레즈비언 커플이 공적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1년 법안의 이름이 Act on Assisted Reproduction으로 바뀌면서 기술적 측면 이상의 논의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Herrmann, 2022). 특히 2013년 개정으로 보조생식기술을 활용한 레즈비언 커플이 공동으로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co-motherhood<sup>1)</sup>)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가 또한 마련되었다.

#### ◎ 덴마크의 현 보조생식기술 지원정책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논의

 보조생식기술은 기본적으로 덴마크의 공적 건강보험을 통해 덴마크 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만 법적 나이제한(45세 이하)이 존재하여 여성이 해당 나이 이전에 난자냉동을 한 경우에도 46세 이상이 되면 공적 및 사적의료기관에서 모두 시술이 금지된다. 또한 IVF는 3번의 시도까지만 공적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의 시술은 사적기관에서만 추가비용을 지출하여 가능하다. 이는 남성은 나이의 제한 없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나이가 많은 여성은 아이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젠더화된 의미를 내포한다(Pedersen, 2023: 8).


 덴마크는 2018년 아이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자와 난자 모두를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이중기증(double donation)을 허용하였으나(The European IVF-Monitoring Consortium (EIM) for th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ESHRE) et al., 2024), 2024년 이전까지 이는 오직 의학적 목적이 입증되는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이후 의학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이중기증을 허용하면서 레즈비언 커플들이 이전보다 유연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 The European IVF Monitoring Consortium (EIM) for th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ESHRE) et al. (2023). ART in Europe, 2019: results generated from European registries by ESHRE. Human Reproduction, 38(12), 2321–2338.

• The European IVF Monitoring Consortium (EIM) for th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ESHRE) et al. (2024). Survey on ART and IUI: legislation, regulation, funding, and registries in European countries – an update. Human Reproduction, 39(9), 1909–1924.

• Retsinformation Denmark. “Proclamation of the Act on Artificial Insemination in connection with medical treatment, diagnostics and research, etc.”, <https://www.retsinformation.dk/eli/ita/2006/923> (접속일: 2025.5.20.)

• 한겨레(2025.05.19.), “20~30대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 낳을 수 있다“ 첫 40% 넘겨,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98163.html> (접속일: 2025.05.19.)

 비혼모의 경우 보조생식기술을 활용하여 두 번째 아이를 가지고 싶은 경우 공적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했다. 이때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두 번째 시술이 가능했는데, 이는 여성이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는 조치였다(Pedersen, 2023). 그러나 2024년 이후 파트너가 없이도 두 번째 시술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덴마크는 1997년 이후 작년(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생식기술과 관련한 법을 개정해왔다. 덴마크의 보조생식기술 입법과정에는 출생률에 대한 국가의 개입보다는 어떤 가족의 형성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들이 있어왔다(Larsen, 2015). 한국 정부가 비혼 출산 동의를 상승 현상을 두고 관련 기술을 저출생 완화의 한 대안으로 여겨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현 상황에서 덴마크의 보조생식기술 활용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은 국내에도 여러 논의할 지점들을 남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1) 이는 한 여성이 난자를 제공함으로써 태어날 아이와 유전적으로 연결되며 다른 여성은 임신을 통해 태어날 아이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 이탈리아 Italy

### ◦ 이탈리아 정부, 여성살해(femicide) 법제와 초안 승인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지난 3월 초, 이탈리아 내각인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여성살해(femicide)를 법률에 명시하는 초안 법안을 승인했다. 본 법안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가족·출산율·평등기회부 장관, 제도혁신·규제 간소화부 장관의 공동 제안으로 상정된 것이다. 본 고에서는 해당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번 법안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과 폭력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여성 살해를 새로운 형사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 또는 증오에서 비롯된 경우, 혹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 또는 인격의 표현을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 해당 법안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범죄 동기와 상황은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가중처벌 사유가 되며, 범죄 내용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1/3에서 최대 2/3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살해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해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일명 레드 코드(Red Code)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검사가 반드시 피해자를 직접 심문해야 하며, 경찰에게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레드 코드 범죄 또는 여성 살해 피해자(또는 유가족)에게는 형 집행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즉, 채권 등록 및 집행에서 일반 피해자보다 우선순위가 보장된다.


✍ 레드 코드(Red Code)란 이탈리아에서 2019년 제정된 법률 제69호(가정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형법, 형사소송법 및 기타 조항의 개정)를 지칭한다. 레드 코드는 형법에서 다양한 범죄를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징역 1년에서 6년, 벌금 5,000~15,000유로에 처한다. 둘째, 피해자의 얼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징역 8년에서 14년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셋째, 결혼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징역 1년에서 5년에 처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넷째, 가정 내 퇴거 명령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3년의 구류형에 처한다.


✍ 소개한 레드 코드 외에도 본 법안에서는 가해자에게 사전 구속 조치가 내려진 경우, 구치소 수감이나 가택 연금 등의 강력한 사전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 감면이나 보상 조치 등으로 석방될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 대한 교육 의무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민감성 강화를 위한 의무적 연수 과정이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 참고자료

- AP News (2025.3.8.). "Italy approves draft law targeting femicide with punishment of up to life in prison", <https://apnews.com/article/italy-femicide-crime-life-prison-meloni-cecchettin-c253498f58502aecaf1cfb3086ee4392> (접속일: 2025.5.14.)
- Italian Government (2025.3.7.). "Comunicato stampa del Consiglio dei Ministri n. 117", <https://www.governo.it/it/articolo/comunicato-stampa-del-consiglio-dei-ministri-n-117/27892> (접속일: 2025.5.14.)
- POLITICO Europe (2025.3.8.). "Italy approves draft law outlaw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politico.eu/article/italy-approves-draft-law-targeting-killing-of-women/> (접속일: 2025.5.14.)

 위와 같이 이번 이탈리아 정부의 여성살해 관련 법안 승인은 이전 또는 현 파트너에 의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분노가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가 비준한 이스탄불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며, 유럽연합이 최근 채택한 2024년 지침 제1385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지침(EU Directive 2024/13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에서 제시하는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특히 2023년 11월 발생한 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바로 20대 초반의 한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이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고, 피해자의 장례식에는 멜로니 총리를 포함해 약 8천 명 이상이 참석했다. 가해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여성 살해라는 범죄를 이탈리아 법체계에 독립된 범죄로 도입하고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서,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여성 학대, 스토킹, 성폭력,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도-좌파 야당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형사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대상 범죄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사회, 문화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양원제 국가로 본 법안은 앞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법으로 최종 확정 및 발효된다.





## 영국 United Kingdom

### ◦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정책 실행과 향후 과제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 가정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피해자 수천 명이 전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 2,000만 파운드(약 371억 6천만 원)를 신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0만 파운드(약 46억 5천만 원)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이하 VAWG)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에 배정되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VAWG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VAWG에 대한 이해와 조기 식별을 강화하고, 명예훼손 기반 학대 예방, 다기관 협력 및 고위험군 관리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제스 필립스(Jess Phillips) 담당 장관은 피해자들이 학대에서 벗어나려 할 때 결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기금의 핵심 목적임을 강조했다.


✍ **(정부 지원과 기대 효과)** 영국 정부의 이번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상담이나 응급처치를 넘어, 학대 상황에서 실제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대 2,500파운드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학대의 고리를 끊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원이다. 또한, 전국 999 긴급 통화 센터에 배치되는 가정폭력 전문가와 헬프라인 확대 운영은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초기 대응의 질을 크게 높인다. 상담 서비스와 재정 지원이 통합된 이 체계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구하는 데 느끼는 심리적·현실적 장벽을 낮추고, 학대에서 벗어나 회복과 독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PAC 보고서가 지적한 구조적 한계)** 이러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VAWG 근절 노력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25년 5월 발표된 영국 의회 공공계정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PAC) 보고서는 정부의 대응이 10년 내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여성 보호소가 서비스 의뢰의 60.1%를 거부했으며, 지역사회 기반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또한 절반 이상(51.4%)의 의뢰를 거부하는 등 현장 서비스의 여력이 심각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피해자를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또한 불안정한 자금 구조로 인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내무부가 VAWG의 복잡성과 피해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 통계 미포함 등 데이터 관리의 한계도 비판했다. 대응이 단편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해, 전면적이고 범정부적인 협력과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은 VAWG가 오프라인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AC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체계 구성과 예방교육, 온라인 유해콘텐츠 대응을 포함한 전방위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 UK GOV (2025.5.13.). "Vital support for victims in £20 million funding boost"  
<https://www.gov.uk/government/news/vital-support-for-victims-in-20-million-funding-boost>  
(접속일: 2025.5.18.)
- UK Parliament (2025.5.16.). "Govt mission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quires strong action on all fronts, PAC warns",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127/public-accounts-committee/news/206868/govt-mission-to-tackle-violence-against-women-and-girls-requires-strong-action-on-all-fronts-pac-warns/>  
(접속일: 2025.5.18.)
- Women's Aid (2025.1.29.). "Women's Aid. (2025) The Annual Audit 2025. Bristol: Women's Aid",  
<https://www.womensaid.org.uk/annual-audit-2025/>  
(접속일: 2025.5.18.)



 영국 정부는 VAWG 대응을 위한 초기 조치를 시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PAC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수준의 대응으로는 근본적 구조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는 단순 범죄 대응을 넘어 문화적·제도적·재정적 전환이 필요한 전사회적 과제이다. 정부는 단기적 기금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과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과 예방 중심 전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여성과 소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와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집합적 노력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